

충남리포트 제101호

ChungNam Report

2014. 02. 25.



CONTENTS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한계마을의 개념
3. 농촌마을 실태조사 및 분석
4. 한계마을정책 추진방안
5. 향후 과제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장, choyj@cd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마을의 과소화·고령화 등의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제안하는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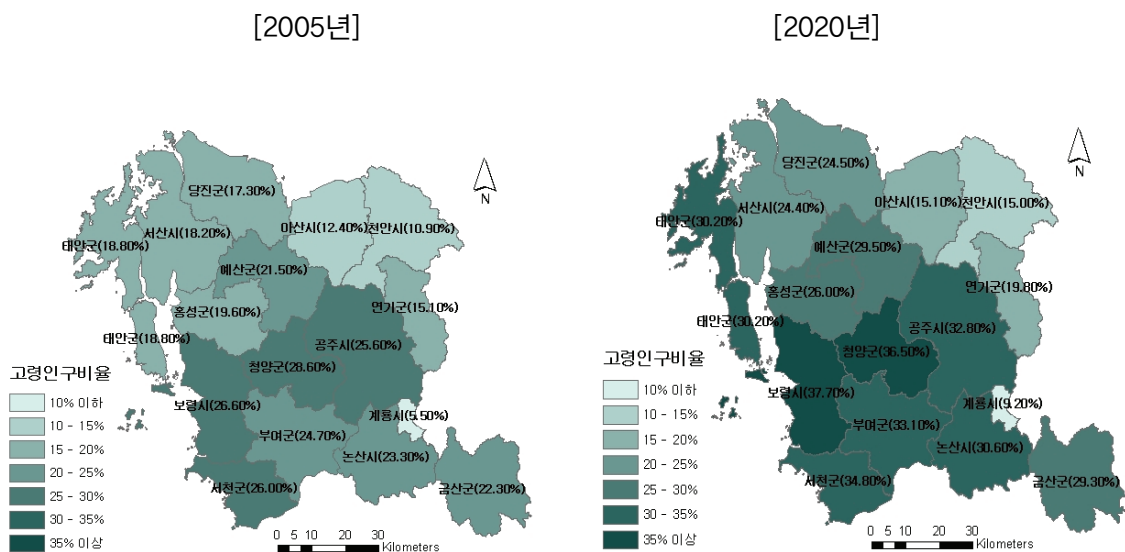
요약

- 한계(限界)마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그 결과 일반 마을과 구별되는 한계마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계마을은 소농 위주의 농업활동과 미약한 농외소득구조를 갖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개별 공장 및 개발행위가 거의 없으며, 마을별 분석시 한계마을은 접근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음
 - 역량을 갖춘 리더가 부재하고,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음
- 한계마을은 마을 재생과 재편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재생과 재편이 불가능한 마지막의 경우 소멸방안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함
 - 재생 : 극도의 한계화가 진행되더라도 마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마을자원과 관련주체의 협력에 의해 재생을 도모
 - 재편 : 마을재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의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이나 기능적으로 다시 구조적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 등의 방법이 있음
 - 소멸 : 어떠한 정책적 투입도 농어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도록 함

연구배경 및 목적 ◀

01

- 농촌지역은 심각한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의 가능성이 있는 마을과 실제 소멸하는 마을이 증가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과소화·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촌마을의 재생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소멸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의 경우 ‘한계(限界)마을정책’으로 마을재생 도모 및 마을의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계마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농교류, 정주대책 마련, 지역산업 육성, 생활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자료 : 김정연 외, 2010

〈그림 1〉 충청남도 사군별 농어촌인구 고령인구 비율 전망

-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과소화·고령화 등의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한계(限界)마을의 개념

- 한계(限界)마을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공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를 일컬어 제기된 용어임
 - 한계(限界)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한계에 다다르다’, ‘한계가 드러나다’ 등의 ‘임계(臨界)’의 의미로 ‘한계농지’, ‘한계기업’, ‘한계수입·비용’ 등의 용어로 활용됨
 - 한계(限界)마을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오노아끼라(大野晃)가 65세 이상 인구의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¹⁾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를 일컬어 제기된 용어임
 - 오니시다까시(大西隆)는 오늘날 농산어촌에서는 다면적(多面的)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가지의 공동화(空洞化)에 의해 농산어촌지역 마을의 기능이 한계에 달한 상태를 한계마을이라고 정립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3가지의 공동화라는 것은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마을(공동체)의 공동화’를 의미함
- 기존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의 개념을 정리하면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생활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의 마을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이라 할 수 있고, ‘한계마을정책’은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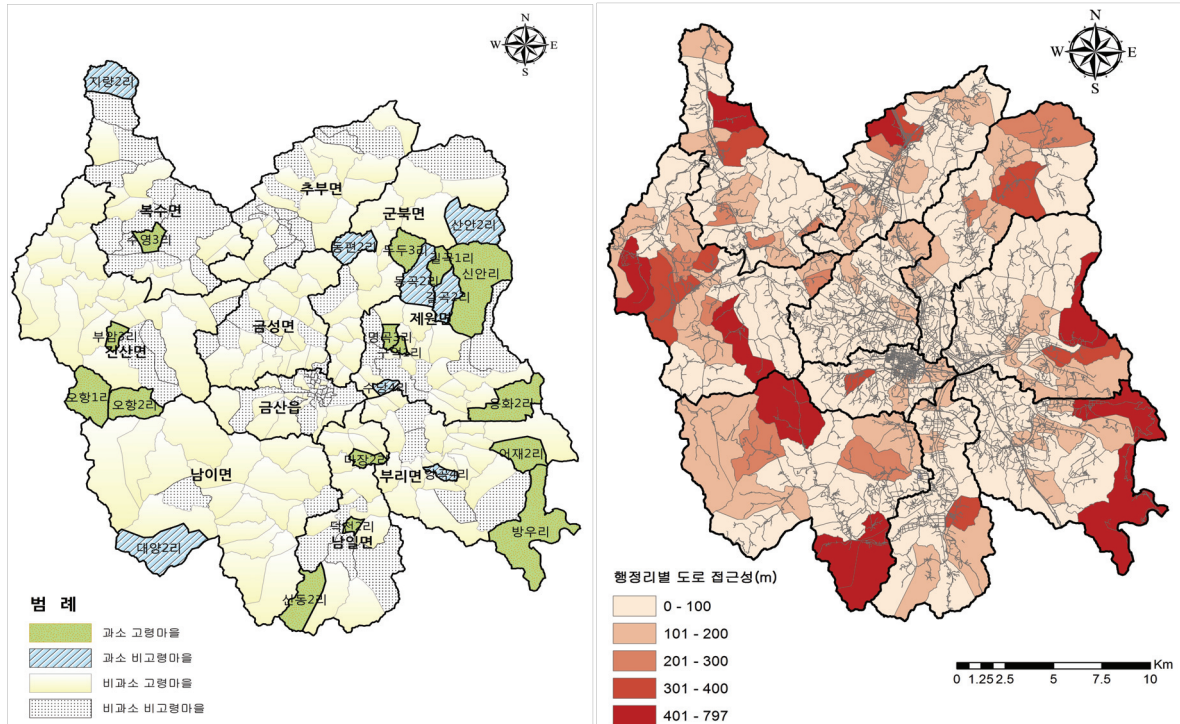
1)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기능이란 생활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생활적 기능에는 마을 축제 계승, 생활환경 유지, 주민자치회(총회)활동의 원활한 유지 등이 있으며 생산적 기능에는 농산물의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의미함

1) 조사 개요

- ◎ 충청남도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한계마을 관련 조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한계마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충청남도 금산군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 우선, 지난해 4월~8월까지 금산군의 전체 마을(행정리) 이장 약 250명을 대상으로 공동화 실태와 기타 정책투입 현황과 주민의식 실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구 및 고령인구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별 마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금산군 전체의 공간자료를 구축하여 한계마을 관련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한계마을(인구와 고령화)에 미치는 공간적 요인과 패턴을 찾아내고 유형별 마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실제 금산군의 일부 마을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및 공간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의 검증과 함께 한계마을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한계마을의 특징 및 정책과제, 그리고 한계마을정책의 방향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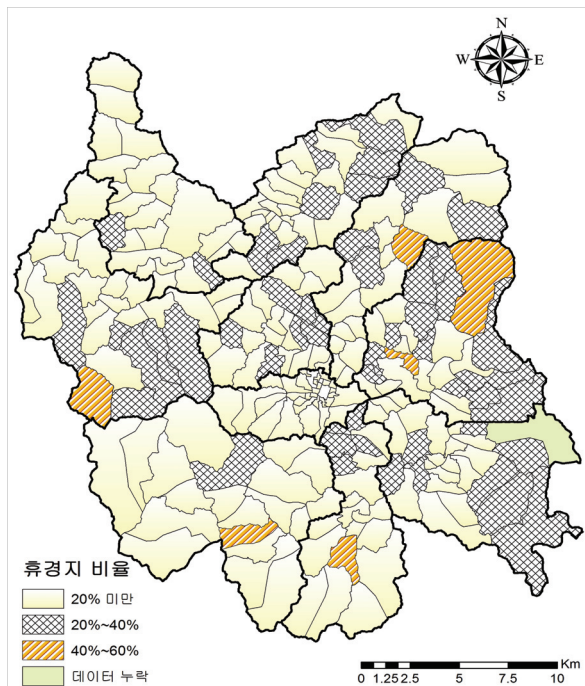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그림 2〉 금산군 농촌마을 분석결과



〈인구유형별 분포〉

〈도로 접근성〉



〈휴경지 비율〉

● 인구규모 50명 이하의 마을을 ‘과소마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50% 이상인 마을을 ‘고령마을’로 보았을 때, 금산군 254개 마을(행정리) 중 과소고령마을은 15개(5.9%), 과소비고령마을 8개(3.2%), 비과소 고령마을 156개(61.4%), 비과소 비고령마을 75개(29.5%) 마을로 나타남

● 과소 고령마을은 일반적으로 도로율이 낮고, 경사도가 가파르고, 군청과의 접근성이 불량하며, 휴경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한계마을을 판단하는 정량화되고 표준화된 기준을 도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 즉, 각각의 마을에 따라 한계마을로 진행되는 원인과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모든 한계마을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움

- 기존의 ‘인구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의 한계마을의 지표대신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로 제안함
 - 일반적으로 50명 이하 규모의 마을이 한계마을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 ‘인구의 공동화’ 기준을 인구 50명으로 설정함
 - ‘경제기반의 공동화’는 토지의 공동화를 포함하여 소득기반 및 소득원이 창출되는지 여부, 작목반, 농어업법인 등 경제조직의 활동 여부 등을 판단
 - ‘신규 커뮤니티의 공동화’는 기존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규인구유입에 따른 새로운 주민커뮤니티의 형성, 그리고 마을발전을 위한 움직임(추진위원회 활동, 도농교류 등) 등을 판단함

- 한계마을의 특징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농 위주의 농업활동과 미약한 농외소득구조를 갖고 있음
 - 둘째,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즉, 토지공동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의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한계마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
 - 셋째, 한계마을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개별 공장 및 개발행위가 거의 없음. 즉,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마을이거나 개발행위가 거의 없어 인구유입이 어려운 입지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도출됨
 - 넷째, 마을별 분석 시 한계마을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다섯째, 역량을 갖춘 리더가 부재함
 - 마지막으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음. 한계마을은 인구유입의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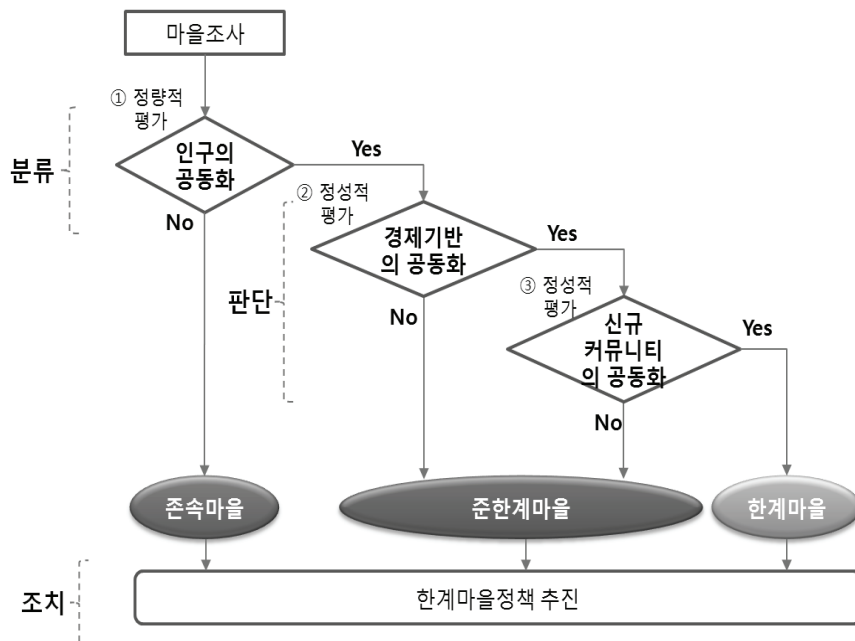
1) 한계마을정책 개념 재정립

● 한계마을정책 개념의 재정립

- ‘한계마을’은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마을의 다양한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로,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가 발생하는 마을”이며, “한계마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을 ‘한계마을정책’이라 재정의함

● 한계마을 판단기준

- 1차 기준(정량적 기준) : 인구의 공동화(인구 50명 기준) 여부
- 2차 기준(정성적 기준) :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 여부



〈그림 3〉 한계마을 판단 프로세스

2) 마을 유형별 정책방향

- ◎ 인구·경제기반·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 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의 유형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존속마을’은 ‘지속가능한 유지·발전 및 거점기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기존의 잠재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H/W 위주의 접근이 필요함
 - ‘준한계마을’은 농어촌 지역개발의 주요 타깃으로 ‘한계마을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치, 정주여건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한계마을로 진행되지 않기 위한 조직이나 활동, 프로그램의 마련 등 주로 S/W 위주의 접근이 필요함
 - ‘한계마을’은 ‘마을재생 및 재편’을 기본방향으로 때에 따라서는 마을재생, 신규마을 조성 등의 H/W 위주의 접근이, 혹은 신규 커뮤니티의 육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등 S/W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며, 재생과 재편이 불가능한 마지막의 경우 소멸 방안을 고려해야 함이 바람직함

〈표 1〉 마을 유형별 정책방향

구분	기준	기본방향
존속마을	인구 50명 초과 인구, 경제기반, 공동체의 기능 유지	- 지속가능한 유지·발전 - 거점기능 강화 - H/W적인 접근
준한계마을	인구의 공동화 (인구 50명 이하) 경제기반의 공동화	- 농어촌 지역개발의 주요 타깃 - 한계마을로의 진행 방지 - 인구유치,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 S/W적인 접근
한계마을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 커뮤니티의 공동화	- 마을 재생, 재편 또는 소멸 - 신규마을의 조성 - 신규 커뮤니티의 형성

3) 한계마을정책 방향

● 재 생

- 마을재생의 기본적인 관점은 ‘마을의 소멸은 곧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며 한계 마을 소멸의 최종적 피해자는 마을주민임과 동시에 전 국가적인 피해’이며, 극도의 한계화가 진행되더라도 마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임
- 한계마을 중에서도 공동화 형태, 잠재자원 및 잠재력, 마을의 특징 등을 갖는 다양한 마을의 유형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만약 한계마을 중 회생이 가능한 마을이 있고 관련주체의 합의형성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마을재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재 편

- 마을재편은 마을재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의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이나 기능적으로 다시 구조적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 등의 방법이 있음
- 행정적 재편 : 인근 마을과의 통합·합병을 추진하거나, 중심마을이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로 한계마을을 흡수시키고, 행정구역의 변경 등을 통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임
- 기능적 재편 : 인근 중심마을의 기능 강화하여 거점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초등학교 등 지역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복수의 마을을 묶어 각각의 마을에 차별화된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고 상호 협력과 상호 보완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 측면에서의 재편을 도모하는 방법임
- 공간적 재편 : 행정적 재편과 기능적 재편이 불가능할 경우, 마을의 공간적 이전 및 외부인구의 유입을 통한 신규마을 조성 등의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임

● 소 멸

- 어떠한 정책적 투입도 농어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도록 함

- 그러나 한계마을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함
- 첫째, 마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마을이 존속하고 있는 한 주민의 합의에 의해 마을 내 분포하고 있는 농지와 주택을 관리하고, 마을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재산, 전통문화 등의 자원을 보전·계승하는 활동을 전개함
- 둘째, 한계마을이 소멸의 가능성을 보일 때, 남아있는 주민 스스로 경작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토지와 그렇지 못하는 토지를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셋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아있는 주민의 삶의 질이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또는, 이주시키는 방법도 있음)
- 넷째, 마을이 완전히 소멸되더라도 출향인이나 후세대에 의해 마을이 재생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한계마을과 마을의 소멸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한계마을을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농어촌마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우리나라 상당수의 농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마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한 마을별 맞춤형 정책이 투입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임
- 한계마을의 ‘재생’, ‘재편’, ‘소멸’에 대한 상세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한계마을의 주요전략으로 ‘재생’, ‘재편’, ‘소멸’의 전략을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략적으로만 제시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3가지의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조영재 부장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202, choyj@cdi.re.kr

※ 본 연구는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2013)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참고 자료 ◆

- 김정연 외, 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충청남도
- 조준범, 2009,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과소화 특성에 관한 연구 - 전남 장흥군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9.9/21(3), pp.163~182
- 성주인·박시현, 2012,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재정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2012.6.12), pp.3~48
- 大野晃, 2008.11, 『限界集落と地域再生』, 京都新聞出版センター
- 大野晃, 『山村環境社会学序論- 現代山村の限界集落と流域共同管理』, 農山漁村文化協会, 2005.03
- 大西隆・小田切徳美・中村良平・安島博幸・藤山浩, 『これで納得集落再生-「限界集落」のゆくえ』, 2011.01, 株式会社ぎょうせい

충남리포트(2008~)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 · 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호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 · 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 · 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 · 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 · 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호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2013-04	एको유지업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 귀농 · 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강마야 · 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허남혁 외2명	2013.07.18
2013-08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이민정	2013.08.09
2013-09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이관률	2013.08.23
2013-10	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지역경제분야-	김양중	2013.09.02
2013-11	도 및 시 · 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	윤정미	2013.09.16
2013-12	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	김중화	2013.10.24
2013-13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이인희	2013.11.15
2013-14	유류사고 이후, 태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산업 발전방안	김중화	2013.11.18
2013-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백운성	2013.11.19
2013-16	충남 스포츠마케팅 추진방안과 과제	김경태	2013.11.20
2013-17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	이관률	2013.11.21
2013-18	충청남도 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김양중	2013.12.19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 · 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